

# 서구 중심적 개발담론의 재해석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미래\*

이 용 균\*\*

## The Reconsidering of the Western based Development Discourse and the Future of Postdevelopment as Sustainable Development\*

Yong Gyun Lee\*\*

**요약**: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개발, 개발담론,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포스트개발,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problems of the Western based development discourse, and to derive the future direction of postdevelopment a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reveal the historical process of formation and change on development discourse. Development generally regarded as the overcome of underdevelopment, inducing the marginalization of the South as a place to follow the development model of the North. State based development discourse (Keynesian development discourse) focused on the growth by industrialization, and the supreme aim of the South was to overcome the underdevelopment. Neoliberalism development discourse emphasized on the market principle based on free competition which was recognized as the best way to provide development. However, neoliberalism discours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inequality of class, causing on the consideration of postdevelopment because of its emphasis on growth rather than distribution and life value. This research revealed the ways of postdevelopment with fair trade and ethical consumption. However, fair trade and ethical consumption discourses clearly show somewhat limitation subsuming into neoliberal development discourse. In this respect, future ways for postdevelopment have to consider the overcoming of powers based on market and capital, and to orient into the value of redistribution in development process.

**Key Words**: development, development discourse, neoliberalism, postdevelopment, fair trade, ethical consumption

### 1. 서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효율적인 지역계획과 개발정책에 기초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발(development)은 현 시대 지역(또는 인간)이 추구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지, 소득, 정치, 인권, 환경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이슈에 개발이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최근 국가와 지역의 개발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창조성(creativity)일 것이다(성경룡 등, 2012). 세대를 가로질러 개발의 효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yonggyunlee@hanmail.net)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은 글로벌 북부의 선진국과 글로벌 남부의 개발도상국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며(Lawson, 2007), 개발이란 용어에는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개발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각 국가들이 추구할 최고의 목표가 된 것은 케인스주의 개발 정책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이용균, 2014), 냉전시대에 제1세계라 불렀던 선진국의 자본주의 진영은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개인의 이익추구에 기초한 공동선을 개발이라고 인식하였고 공산주의 진영은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논리가 개발의 담론이었다(이희재 역, 2010; 조효제 역, 2013; Potter, *et al.*, 2012). 냉전시대의 두 진영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개발담론이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 및 확대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미국은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기존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다른 국가, 특히 제3세계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고 그 결과물이 개발이었다. 개발은 발전된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개발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 기존의 피식민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개발도상국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북부의 개발 과정을 모방하고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인식되었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하였고, 국경 없는 세계무역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유시장의 확대는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는 선진국을 위한 개발의 대명사로 인식되었고, 개발도상국가에서 개발이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계층 간, 지역 간 소득의 차이를 심화시키면서 글로벌 북부에 의한 글로벌 남부의 착취가 심화되었고(최병두 역, 2007), 이로 인하여 개발효과는 부유한 국가와 계급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희재 역, 2010). 개발은 글로벌 북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남부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이러한 개발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빈곤의 해소와 기초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개발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이성근, 2013). 그 후 내생적 개발, 지속가능성 개발, 창조적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포스트개발(postdevelopment)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Lawson, 2007; Williams, 2009). 이러한 포스트개발은 개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개발담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발을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Lawson, 2007). 포스트개발 옹호자들은 개발에 내재한 역사·지리적 의미를 밝히는데 관심을 가지며, 내생적 개발을 지향하고, 개발에 내재한 권력관계의 파급효과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포스트개발로서 개발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을 역사적,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담론의 형성, 개발담론의 확대와 보편화, 개발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이론(예: 식민주의와 근대화이론,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 인간중심적 개발이론, 신자유주의와 글로벌이론 등)에 대한 고찰도 포함된다. 개발의 정책적 측면과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 및 시장주도 개발정책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개발 프로젝트에 내재한 성장 논리와 권력관계의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획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담론에 내재한 시장정당화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어 포스트개발을 위한 현 시대 개발담론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빈곤을 재해석하고, 글로벌 남-북 관계에서 선진국의 폭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재분배에 기초한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에 토대를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2.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

서구에서 개발이란 용어는 라틴어를 사용하던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인식된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개발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장 또는 진보’, ‘진보적 제품이나 사고’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Oxford Dictionary, 2015). 개발이란 용어는 라틴어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의 의미 또는 “쌓여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23). 개발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었는데, 산업화 이전에는 ‘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개발이란 사물이나 생물의 잠재력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로 식물과 동물의 성장을 의미하였다(이희재 역, 2010).

근대화(modernization)와 산업화(industrialization)를 거치면서 생장이란 의미를 갖던 개발의 개념은 자연법칙처럼 필연성을 갖는 역사과정으로 인식되었고, 헤겔의 역사개념과 다윈의 진화개념은 ‘마르크스의 발전개념’으로 전환되었다(이희재 역, 2010). 식민지 확대를 거치면서 개발은 식민지배를 위한 정당화의 수단이 되었는데, 정복자는 문명화되지 못한 미개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원주민의 복리(wellbeing)를 증진시킬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었다(이영민·박경환 공역, 2011; Williams, *et al.*, 2009).

원래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은 18세기 전통주의(traditionalism)에 대한 반대로서 등장하였다(Potter *et al.*, 2012). 낙후된 사회적 특성을 바꾸는 것이 근대성으로 이해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근대성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세상에 대한 유일하고 확고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계몽사상(Enlightenment thinking)은 서양의 합리적 사고 방식인 근대성의 토대가 되었고, 개발이란 곧 근대화, 경제성장, 역량강화, 인간능력의 확대로 인식되었다(Lawson, 2007).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발전 및 번영을 위한 기술적, 과학적 지식이라고 인식되었다. 글로벌 북부가 이성, 지식, 지혜의 중심으로 인식된 반면에, 글로벌 남부는 무지, 야만, 미개의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즉, 글로벌 북부의 개발 모델을 따르는 것이 글로벌 남부가 따라야 할 지상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개발은 식민지배

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개발은 식민지 주민의 문명화를 위해 백인이 저야할 의무로 그리고 피식민지 주민들이 성취할 이상으로 간주되었다(조효제 역, 2013; Williams, 2009). 따라서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은 식민담론 속에 내재되어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개발은 소득증가, 건강수준 향상, 교육수준 개선, 민주적 참여의 증가와 인권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개발은 바람직한 변화로 인식되는데, 이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변화, 열등한 것에서 우월한 것으로의 변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이희재 역, 2010). 이러한 개발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개발을 통해 저개발이 개념화 되었고, 저개발은 각종 사회문제를 가져오는 온상으로 인식되었다. 개발은 복리와 동일하게 인식되었고, 복리란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이러한 개발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담론이 형성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이희재 역, 2010; 조효제 역, 2013).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1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은 과거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취임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화 논리를 포기하고, 동시에 공산주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는 공정한 민주적 거래에 초점을 둔 개발로서 대체하자고 제안하였다(이희재 역, 2010). 이는 세계질서를 개발된 국가 중심으로 개편 및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루먼의 취임 이후 개발이란 용어는 글로벌 북부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관으로, 그리고 글로벌 남부가 지향할 바람직한 사회적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트루먼에 의해 제기된 개발담론은 개발과 함께 ‘저개발’이 무엇인지도 정의하게 되었다. 개발담론에 의해 글로벌 남부의 약 20억 인구는 저개발 상

태의 주민이 되었다. 즉, 개발담론은 글로벌 남부의 다양한 소득, 지위, 신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를 빈곤한 상태로 동질화 하였다. 이후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개발을 지향한다는 것은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임이 사회담론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재건은 개발이란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개발도상국은 후진성 개선이라는 맥락에서 개발담론을 확대하였다. UN, GATT 등 국제기구의 등장은 빈곤율, 실업률, 성장률, 국민총생산 등 측정가능한 수와 비율로서 국제 간 개발의 척도를 비교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담론은 선진국의 자유, 민주주의, 근대화 담론을 과거 식민지인 개발도상국에 수용시키는 효율적 수단이 되었다(Lawson, 2007). 개발담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남부 저개발의 원인(교역조건, 불평등 교환, 부패, 시장실패, 민주주의와 기업가정신 결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희재 역, 2010).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당시 개발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근대화된다는 것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 농업사회보다 합리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개발은 자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다.

일단의 주류경제학자들은 개발담론을 토대로 글로벌 남부를 저개발상태로 폄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글로벌 북부에 비해 글로벌 남부는 낙후되고, 인구가 지나치게 많고, 실패한 개발로 인식하였다(Lawson, 2007). 예를 들어, 글로벌 남부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저개발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빈곤의 원인으로 이해되었다. 즉, 글로벌 남부는 과잉인구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환경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남부에 대한 격정과 함께 차별로도 나타났는데, 글로벌 남부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자의 증가를 우려하는 사회적 담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이영민 등 공역, 2013). 하지만 글로벌 남부 빈곤의 원인이 인구가 많기 때문만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과잉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집트도 생각보다 인구가 과잉된 것은 아니며, 인구증가율보다 농업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Lawson, 2007).

이러한 개발담론은 글로벌 남-북의 권력관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글로벌 남부 가난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글로벌 북부의 개발과정을 답습할 것이 강요되었고, 글로벌 남부의 모든 문제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 모델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당시의 개발담론은 글로벌 남부의 가난을 가져왔던 글로벌 북부의 착취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언급되지 않았다(최병두 역, 2007).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개발담론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인간성 상실과 환경파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인간중심적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양적 성장에 앞서 인간의 기초수요와 자족적이고 생태적 개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Potter, et al., 2012). 인간중심적 개발에서는 인간과 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한 개발윤리가 강조되었고, 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글로벌 남부의 개발과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사회의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대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었다.

마르크스주의에 초점을 둔 학자들은 이러한 개발담론에 심한 반대를 하였는데, 이들은 글로벌 북부가 주도하는 개발은 글로벌 남부를 종속적 관계로 이끈다면서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을 제시하였다. 종속이론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균등한 교환 관계와 잉여가치의 재분배 문제에 의해 글로벌 남부 발전은 글로벌 북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개발에 의한 종속관계는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계층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선진국과 맺은 파트너십 관계가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으로 이해한다(Potter et al., 2012).

개발담론은 케인스주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개발담론의 확대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는데 기여하였고,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희재 역, 2010). 개발담론은 초국가적 소비자의 출현을 가져왔는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특정한 국가의

문화와 소비 패턴에 엄매이지 않으면서 서로 비슷한 행동과 생활양식을 소유하는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고, 개발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남부에서 개발을 옹호하는 강력한 지지기반이 형성되었다(이희재 역, 2010).

최근 개발담론은 자연과 사회공동체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개발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서는 인간의 복지와 자유가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만 추구되지 않으며, 개발은 인간이 향유할 자유를 확대해가는 과정이자 자유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예: 빈곤, 독재, 인권 침해, 사회적 배제, 공공시설의 부족 등)으로 이해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특히 인간개발에서는 인간적 능력(보건, 영양, 교육, 위생), 정치적 능력(인권, 정치참여), 인간안보(기아, 질병, 재해, 전쟁, 분쟁으로부터 보호), 사회적 능력(사회적 지위의 인정)이 강조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26).

지속가능한 개발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의 논리와 생태적 개발이 대립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인간 지향적인 경제를 추구하고, 인간의 미래와 안전한 지구를 강조한 개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소통을 고려한 개발이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에서는 글로벌 남부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다양한 포스트개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포스트개발 담론은 현재의 성장 중심적 개발에 반대하고 내생적 개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로벌 남부와 글로벌 북부 간 착취적 관계에 반대한다. 이는 기존 개발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 실체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 장에서는 개발담론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케인스주의 개발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발 정책을 토대로 개발담론에 배태되어 작동하는 권력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

### 3. 국가 및 시장주도 개발담론

#### 1) 국가주도 개발담론

개발담론은 케인스주의 정책을 통해 확대되었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북부는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 타협을 추구하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게 된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국가적 스케일에서 추진되는 개발을 강조한 반면에,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커뮤니티 스케일에서의 개발은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Lawson, 2007). 즉, 케인스주의는 국가주도 개발담론에 해당한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이 작동하는 기저에는 희소성 논의에 바탕을 둔 개발담론이 놓여 있다(이희재 역, 2010). 희소성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논리를 펼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18~19세기 경제학자들이 과학적 토대로서 경제학을 설명하고, 희소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진리로서 수용되고 일상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희소성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사회의 모든 논리에 앞서고 경제의 규칙에 사회의 규칙이 종속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필요로 한다. 인간의 고귀함은 상품화된 노동으로 폄하되고, 전통의 가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폄하되고, 개인적 숙련기술은 함량미달로 폄하되면서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인이 지상 최고의 목표로 인식된다(이희재 역, 2010). 즉, 경제적 가치가 사회에서 진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가 폄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주도 개발담론은 트루먼 대통령의 온정주의적 선언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글로벌 남부의 불운한 계층이 자립하기 위해 선진국이 도와야 한다는 것은 글로벌 남부를 저개발 단계로 가치 폄하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는 제3세계 국가가 독립 후에 또 다른 의존구조를 갖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3세계는 낙후되었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임을 명시하고 있다(조효제 역, 2013). 이러한 개발담론에서 개발은 국가가 추구할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되었다.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발전된 국가로 인식되었고,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는 열등한 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경제성장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향할 목표로 확고한 위치를 차

지하게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의 산업화였다. 1960년 역사경제학자인 로스토우(Rostow)는 경제성장의 단계(the stage of economic growth)라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경제개발은 선형적이고 진보적 과정을 단계적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Lawson, 2007). 그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약단계가 필요한데, 이는 산업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대화이론은 저개발을 당연한 문제로 인식하며, 제3세계의 문제는 효율적인 개발정책의 결핍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당시 개발담론은 동서의 냉전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제3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번영과 안정으로 향하는 길임을 명시하고 있다(안영진 등 공역, 2011). 당시 제3세계에 권장되었던 국가 주도 산업화의 대표적 사례는 ‘수입대체 산업화’로 이는 관세와 수입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인데 사실은 선진국 기업의 직접 투자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조효제 역, 2013).

국가주도 개발담론이 제1세계와 제3세계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전후 복구와 세계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브렌턴우즈 협정과 관련 회의를 바탕으로 IMF,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의 기구를 설립 및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통화가 안정되었고,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세계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UN, IMF, GATT를 비롯한 세계 기구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개발담론이 확대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의 확대 과정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이었다(조효제 역, 201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제3세계에 원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고 제3세계 도시인구의 증가를 지탱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식량 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값싼 수입 농산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국 내 농업부문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농업부문의 종사자 중 상당수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제3

세계의 농업과 제조업은 글로벌 북부에 의존적인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제3세계에서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 담론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농업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신품종 개발, 화학비료 사용, 기계화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하지만 녹색혁명으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화학비료의 사용에 따른 전통적 생태농업은 파괴되었고, 기계화의 도입은 농촌의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였고, 중자산업 부문에서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조효제 역, 2013).

1970년대 후반 이후 제3세계에 포함되었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은 신흥공업국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발 정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제1세계와 제3세계를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흥공업국은 선진국을 위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제3세계의 개발을 부추기는 성장 모델로 인식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성장은 노동의 신국제적 분업을 가져오면서 국가주도 개발담론이 제3세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개발담론은 결국 제3세계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세계에서 1970년대 국가 주도의 개발정책은 외채에 의존한 것이었다.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대출붐이 나타나면서 미국은 달러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통화 회수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대부 기간이 줄었고 이자율은 인상되었고 당시의 석유파동에 의한 유가 인상은 제3세계 부채를 가속시켰다. 1980년에 접어들면서 제3세계는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해야하는 채무의 덩(debt of trap)에 빠지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제3세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채무국의 경제에 개입하였는데, 서민을 위한 복지를 대폭 축소하는 조건이었다. 1970년대 제3세계에서 외자에 의존한 개발을 추진한 것은 권력층과 엘리트층이었는데, 결국 빛은 가난한 사람들이 져야할 부담으로 다가왔다. 멕시코, 브라질, 태국, 터키의 국제 금융은 결국

복지서비스의 예산 감소를 가져왔고, 외채 상환의 부담은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조효제 역, 2013). 제3세계의 채무를 조정했던 권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 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개발은 국가 주도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주도적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케인스주의에 토대를 두었던 국가주도 개발담론은 막을 내리게 된다.

## 2) 시장주도 개발담론

국가주도 개발담론이 시장주도 개발담론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제침체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었으나, 자본가와 엘리트 계층의 수익이 충분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배분의 양이 감소하였고, 상위계급이 차지할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상위계급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본축적의 조건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복원하고자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시장주도 개발담론을 주도하게 된다(최병두 역, 2007; 최병두, 2012).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을 재해석하여 시장에 의한 합리성만이 개인의 선택과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최병두, 2012). 국가주도 개발담론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국가 중심적 관료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의한 합리적 선택에 의해 해결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장기적 통화 공급에 대한 조절을 토대로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고 보며, 공공부문의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자유시장 시스템의 보장이 각종 사회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가치 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한다. 국가는 자유시장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되는데, 특히 탈규제, 민영화, 민관파트너

십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된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 하에서 국가의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자본축적의 조건을 최적화시키는 것에 해당하며, 자본의 요구에 맞춰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해당한다(임동근 외 공역, 2010).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뉴욕의 재건 과정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최병두 역, 2007). 1970년대 뉴욕의 경제 위기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창출되었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유순하고 창의적인 노동자가 금융, 디자인, 마케팅, 광고 등의 생산자서비스 업종에 투입되면서 뉴욕은 새로운 활력을 맞이한다. 이러한 뉴욕의 변화는 레이건 행정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고, 결국 경제 엘리트 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9년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케인스주의 재정과 통화정책을 포기하였고, 레이건 정부는 탈규제, 조세감면, 재정축소, 노조에 대한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임동근 등 공역, 2010).

경제 엘리트들은 자유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일반인이 따라야 할 이데올로기로 보편화시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적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과 진보적 정치에 대한 반대가 대두되었다(최병두, 2012). 경제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의 포섭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다. 대처 수상은 1979년 경제개혁이란 슬로건을 통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 금융권의 개혁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였다. 특히 대처 수상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주의를 반대하면서 개인주의, 사적소유, 개인책임, 가족 가치를 강조하였다(임동근 등 공역, 2010).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사회에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해진 국가권력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고, 케인스주의 정책 하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다양

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유강은 역, 2012). 결국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수익의 재분배와 자본축적을 통해 확대될 수 있었다. 즉, 시장원리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며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담론이 확대 및 재생산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노동자 탈취에 의한 자본축적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최병두 역, 2007). 공적 자산의 민영화와 상품화는 이윤가능성이 낮았던 영역에서 자본축적의 가능성을 가져왔고, 자본주의 역사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권리를 위해 획득된 공적 소유권이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되었고, 금융화는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 부를 가져다주는 시장조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제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당시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선진국으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에 의해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해야 할 부가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국가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하위계급에 할당되었던 부를 상위계급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개발의 범위는 국가라는 스케일을 뛰어 넘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조효제 역, 2013). 국제기구들은 198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침체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원조의 대가로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을 강요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의 발달,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자본의 지리적 이동 확대, 통화주의와 자유시장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최병두, 2012).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은 지구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달성된다고 믿는데, 지구화는 국가 간 교역의 확대, 기술과 자본의 이동, 세계시장의 통합 등을 통해 전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과 소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지구화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시장 중심적 미시경제 정책, 세계시장의 통합, 시장자유주의를 위한 국제적 제도의 개혁 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조효제 역, 2013).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부와 권력의 집중을 가져오고 있다. 전 지구적 규모에서 구매력이 있는 40%가 자유시장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조효제 역, 2013). 시장은 자유로운 것이라기보다 제도가 만든 산물이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은행, 초국가적 기업, NGO 등이 가세한 권력의 장으로 인식된다. 금융의 지구화는 모든 계층을 위한 수익의 확대를 인식되기 쉬우나 사실은 노동계급에 대한 부와 소득을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병두, 2012). 결국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민주적이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엘리트 거버넌스를 선호하고 합법이란 이데올로기에 의한 권력과 그에 따른 폭력이 정당화 되는 문제 많은 담론으로 이해된다(임동근 등 공역, 2010).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을 많이 소유한 자본가와 경제엘리트의 자유와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경제 엘리트의 확대된 자본축적이 생산에 투입되기보다는 주식, 부동산 등 투기적 목적에 활용되면서 생산을 위한 확대 재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소득감소와 소비확대의 불균형은 신용카드 산업의 확대와 가계 부채를 확대하였으나 금융정책은 노동자의 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본가계급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설계에 초점을 둔다(최병두, 2012). 이런 맥락에서 하비(Harvey)는 신자유주의를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시스템으로 이해한다(최병두 역, 2007). 즉, 분배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돌아갈 몫이 자본계급에게 돌아가고, 자본가와 경제엘리트의 계급권력이 복원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지속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융부문의 무책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유강은 역, 2012). 금융시장을 통한 개인의 대량 채무는 대량소비를 유지시키면서 자본가는 부를 축적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케인스주의 시대에는 산업노동자를 통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시장에 대한 자본 공급(금융의 역할 포함)을 통해 자본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예를 들어, 유연적 생산방식이



확대되면서 부품이나 완제품의 공급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탕헤르(Tangiers)에 위치한 의류업체는 지난 3년간 약 30%의 가격인하를 요구받게 되었고, 제품의 납품 기일의 단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주성수 역, 2010). 유연적 생산에 따라 부품(완제품) 제조업체의 임시 노동자는 업무의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쇠퇴를 가져왔는데, 세계 노동자의 약 90%는 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주성수 역, 2010).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모든 부문에서 상업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 문화, 자연, 예술 등의 상품화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며, 자본가는 금융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유강은 역, 2012).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저항문화가 나타나고 있다(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복지축소는 다양한 NGO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NGO는 마치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를 통해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NGO를 비롯한 시민운동이 사회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임동근 등 공역, 2010).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공동체에 의존하기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법정해결에는 많은 돈이 요구되며 법원의 결정은 계급편향적인 경향이 있다(임동근 등 공역, 2010). 이처럼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새로운 개발담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4.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

##### 1) 신자유주의 비판과 해체

포스트개발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해당한다.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지배집단이 자유시장의 논리를 토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생활 전반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이자 이데올로기이다(최병두 역, 2007; 최병두, 2012). 겉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사실 신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자유란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국한되며, 개인에 대한 구속과 억압이 내재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지나친 개인주의는 사회적 부정성을 야기하므로 질서 회복을 위한 강제적 수단 사용은 정당하며(예: 노조운동 탄압), 이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제를 위한 국가주의 의식이 고취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경제 질서로서 현 사회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인식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은 위협하고 부족한 사고로 간주된다(김현미 등, 2010).

신자유주의 담론은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치체계이다(최병두, 2012).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개인 소유권과 자유, 자유시장과 무역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복리가 증진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제자본주의의 재조직을 통한 자본의 재구축과 계급권력을 복원하는 정치적 기획으로 경쟁을 미덕으로 부각시키지만 실제로는 집중된 자본과 독점 권력에 시장을 맡기는 것에 해당한다(임동근 등 공역, 2010).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출발을 시장으로 인식하며,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누락하고 있어, 실제로는 인간의 복지가 향상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김현미 등, 2010). 이처럼 신자유주의 담론은 소수의 성공신화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개인의 기대수준을 높인다(김현미 등, 2010).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지나치게 시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독점 권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가 시장실패를 가져옴을 인정하지 않는다(최병두, 2012). 즉,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접근에서 개인적 능력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경제적 엘리트 계층의 자본축적과 계급 권력 간 네트워크에 의한 권력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인데, 사실 신자유주의에서 강조되고 작동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모방하지만 사실은 국가의 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은 일종의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해당한다(Lawson, 2007). 개인은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상품을 교환하고 해외로 자본의 수출을 통한 투자이익을 극대화한다. 시장원리에 의해 개인의 소득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화되고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신자유주의 담론은 제시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성장과 침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시장의 정당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또 다른 한계는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민간부문은 효율성이 높거나 낮은 다양한 산업과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마치 민간부문은 모두 효율적인 경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유강은 역, 2012). 즉, 시장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부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부가 증가하는 것이 사회가 희망하는 것이라면 시장원리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면서 부의 증가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은 감소한다고 본다(유강은 역, 2012). 하지만 시장은 소비자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지만 실상 일반 소비자는 어떤 물건의 생산을 결정하는 권력을 갖지 못함을 신자유주의 담론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많은 문제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담론이 유지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위협 대처 능력이 뛰어난 담론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해체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내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 시대 개발이 지향할 방향을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2) 개발 담론의 제고

현 시대 개발담론의 쟁점은 어떻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새로운 담론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이

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개발담론의 방향은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장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조호제 역, 2013). 개발이란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와 함께 다가올 미래를 관리하는 것이며, 경제적 생산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인간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의 담론적 전환이 필요하며, 기존의 개발담론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가치 존중의 복원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배제된 계층의 복원을 위해서는 개발의 반대에 놓여 있다고 인식되는 빈곤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빈곤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와 복지를 달성하는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적 박탈과 함께, 정신적 박탈(무기력, 모욕, 비인간적 대우 등)을 포함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도 빈곤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이러한 빈곤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소득과 자산의 부족,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과 무력감, 그리고 다양한 취약한 위치성(positionality)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빈곤의 인식에서 간과한 것은 빈곤이 권력의 부재 상태로 인간의 통제 능력을 거부당한 상태에 해당하며, 빈곤은 불균등과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주성수 역, 2010). 즉, 빈곤의 의미는 글로벌 북부 주류사회의 권력관계가 만든 산물이며, 글로벌 남부는 인구과잉, 굶주림, 가난한 상태인 저개발로서 주변화 된다. 빈곤은 주류 개발담론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북부의 개입이나 글로벌 북부식 개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된다(Lawson, 2007).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남부의 빈곤이 아니라 글로벌 북부의 과잉소비라고 할 수 있다. 과잉소비가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전혀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만 주류사회의 시각에서 이런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잉소비가 문제라면 해결책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분배와 공평한 자원의 소비일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북부의 주류사회는 글로벌 남부 빈곤의 원인을 글로벌 북부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에서 찾지 않고 글로벌 남부의 비효율성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재인식을 어떤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친빈곤층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빈곤층 성장이란 1974년 세계은행의 보고서 “성장과 재분배(redistribution with growth)”에서 제기되었는데, 1999년 ADB(Asia Development Bank)는 빈곤층을 위한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 계획,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소외계층의 노동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브라질은 베트남보다 소득이 3배 많지만, 브라질 하위 10%의 소득은 베트남 하위 10%의 소득보다 낮다(주성수 역, 2010).

실제로 빈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주성수 역, 2010). 인간은 권리와 더불어 권리를 실현할 역량이 필요한데, 빈곤의 상태에서는 역량을 실현할 능력이 훼손되며, 불평등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낭비하며,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제약할뿐더러 세대를 거쳐 빈곤을 대물림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빈곤층이 갖는 취약성(vulnerability) 때문이라 인식할 수 있는데, 취약성은 개인, 공동체, 사회가 위험과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글로벌 남부의 취약성은 글로벌 북부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도록 한다.

스피박(Spivak)은 글로벌 북부에 의한 글로벌 남부 폭력을 서발턴(subaltern)의 관점에서 설명한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그녀에 의하면, 개발의 방향이 하나이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서발턴으로 통칭되는 글로벌 남부의 상황을 무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인류의 발전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은 서발턴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UN의 창설은 포스트 식민성의 유지를 위한 세계적 거버넌스 체계인데, 그 중심에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헤게모니를 작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선진국이 개발담론을 통해 수행한 폭력에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희생자 계층을

생산하고 선진국은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가 성장 중심의 개발을 받아들여야 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기술과 자금을 원조한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 개입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에 해당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국민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타자화 하는 폭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개발을 운운하는 신제국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국민을 원조가 필요로 한 대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구화에 편입되기를 강요한다. 지구화에 편입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제국주의자의 논리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있어 진정한 장애물 자체이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폭력은 생태계에 대한 가치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실 생태계의 가치는 시장의 가치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담론은 자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운운한다(안영진 등 공역, 2011). 생태계의 보존 정책이 선진국의 개발담론에 의해 추진되면서 진정으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이 생태계 보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집단에 의해 추진되면서 실제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현지 주민의 견해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조효제 역, 2013).

이처럼 포스트개발을 지향한다는 것은 일종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개인의 발전과 성장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상당 부분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빈곤과 불평등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전형에 해당한다. 이제 개발담론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에 걸친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스케일의 상품사슬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품사슬과 가치사슬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 개발은 한 국가적 스케일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스케일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집단 간 사회적 관계이다. 즉, 국가주도의 개발은 현재와 같은 초국가적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포스트개발을 위해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국가주도 개발담론)와 방법론적 개인주의(신자유주의 개발

담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3) 재분배로서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포스트개발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재분배로 국제적 측면에서는 국제무역의 개선, 국내적 측면에서는 소비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지역의 개발에서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분배이며,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때 성장은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유화와 탈규제를 받아들인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 빈곤층이 1억 3,600만 명에서 2005년 2억 9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주성수 역, 2010).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fair trade)과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무역은 현재의 시장원리를 그대로 존속하면 글로벌 남부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시작 및 확대되고 있다(Fridell, 2007).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이유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지구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협정국가에 대한 일방적 특혜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이해된다(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b). 즉,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원리 속에 자유 선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강압적 선택에 해당한다(박진희 역, 2010; 이용균, 2014).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하면서 국제 무역거래 시스템을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적 측면에서는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생산자-소비자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글로벌 남부/글로벌 북부, 공급자/구매자 간 권력의 불균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용균, 2014, 100). 즉 공정무역은 원조가 아니라 글로벌 남부 생산자의 내생적 성장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포스트개발의 운동에 해당한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의 정의를 실천하는 대안운동으로서 확대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유통·판매자-소비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불공정한 유통과정을 개선하여 시장가격 보다는 공정한 가격을 지향하며, 무역에 따른 수익이 생산자에게 더 많이 할당되면서 생산자의 역량강화를 추구한다. 이와 함께, 공정무역은 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경쟁원리, 자본축적 및 이윤의 극대화를 도덕적 가치에 의해 해결하자는 원대한 포부를 갖춘 사회운동이다(Fridell, 2007).

공정무역의 확대는 개발도상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생산자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적 결속의 강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환경문제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이용균, 2014). 생산자에게 일반거래보다 높은 가격이 제공되면서 생산자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조합의 결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나타났고, 생산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대두되었고, 유기농 재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등 환경문제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포스트개발로서 공정무역은 다양한 NGO 활동에 의해 탄력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많은 서비스가 민영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서민은 이들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었다. NGO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면서 공정무역도 이들 단체의 영향 속에 성장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의 공정무역 거래업체가 NGO 활동에 기반을 두고 시작되었다(이용균, 2014). 또한, 다양한 단체가 공정무역을 지지하면서 정치영역에서도 공정무역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료를 공정무역 제품으로 바꾸기도 하였다(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a).

하지만 포스트개발로서 공정무역은 많은 제한과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공정무역이 포스트개발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

제, 공정무역은 시장시스템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인다. 공정무역이 성장하면서 초기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였던 생산과 소비는 현재의 시장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고, 공정무역 단체가 공정무역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선결조건으로 등장하였고, 2000년대 유가인상과 물가상승은 생산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이용균, 2014).

둘째, 대기업의 공정무역 참여는 포스트개발로서 공정무역 발전의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Lyon and Moberg, 2010). 사실 대기업은 공정한 거래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공정무역에 참여하는데, 거래 규모와 판매에 있어 소규모 공정무역 단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권력을 갖고 있다. 이는 공정무역이 대기업 주도의 무역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정무역의 인증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제품의 표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한다(Marston, 2013).

셋째,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결정이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신-종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천규석, 2010; Fridell, 2007).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공정무역 단체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은 수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일종의 생태식민주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지속적인 주변화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공정무역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용균, 2014). 포스트개발로서 공정무역은 서발턴으로서 글로벌 남부 생산자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실천되는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분배를 위한 포스트개발에서 신자유주의 개발 담론을 대체할 것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윤리적 소비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기호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이다(배영달, 2005). 현대사회에서 소비 패턴은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다(천경희 등, 2014). 윤리적 소비란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사회운동이다(이용균, 2014). 이는 소비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윤리적 소비가 대두되었던 1990년대에는 국가에 의한 폭력, 인권, 환경파괴, 무책임한 마케팅, 동물학대 등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에 기초한 소비가 강조되었다(천경희 등, 2014).

이런 맥락에서 윤리적 소비는 시장과 성과 중심의 개발이 아닌 포스트개발이 지향할 가장 바람직한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이란 맥락에서 제품 소비에서 윤리적 판단을 하고 이는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줄이고, 비윤리적 기업과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윤리적 상품에 대한 적극 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가져올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상품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윤리적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데, 이는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담론으로 인식될 때는 포스트개발로서 윤리적 소비의 의미는 그 가치를 잃기 쉽다. 소비자는 세계의 번영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맥락에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유된다. 아파두라이(Appadurai)는 소비의 물신화(fetishism of consumption)를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화'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자본에 의한 탈취를 설명한다(차원현 등 공역, 2004). 진짜 주인은 생산자(자본가)와 생산을 구성하는 권력인데, 마치 소비자가 행위주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소비 물신주의는 단순한 선택자인 소비자를 사회변화를 위한 현명한 행위자로 인식시킨다. 이는 다시 인간의 정체성은 소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작동하면서 소비 물신주의는 확대된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담론 하에 소비자는 생산이나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서 이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는 지구화 경제 속에서 인권, 노동,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정자로 인식된다. 즉, 시장을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조절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인데, 윤리적 소비 담론

은 소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이용균, 2014). 따라서 포스트개발로서 윤리적 소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만, 현재까지는 시장과 자본에 의한 개발의 부작용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포스트개발로서 윤리적 소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개발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참여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포스트개발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기보다 자본이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힘을 빌리는 또 다른 탈취와 축적체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최병두 역, 2007).

## 5. 결론

개발의 역사는 인류가 도시와 지역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면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개발이란 용어는 소득, 복지, 인권, 환경 등 각종 사회적 이슈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사용된다. 케인스주의 개발담론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면서 개발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구할 최고의 목표로 부상하였다. 개발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고, 저개발은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규정되고 후진성은 개발도상국이 극복할 지상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개발 자체가 갖고 있는 분배의 한계가 이슈로 제시되면서 내생적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개발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확대는 지구화, 지역화 경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빈부격차, 환경문제, 소외와 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개발은 성장과 복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었고,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지상 최고의 가치로 제시되었고, 성장지역의 효과는 주변부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었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만, 계층과 지역 간 소득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시장을 통한 권력의 유지와 확대가 지배집단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으로 포스트개발은 다양한 권

력이 충돌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발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개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포스트개발의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개발이 하나의 담론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발과 빈곤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포스트개발은 배제된 계층의 삶을 존중하고 빈곤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빈곤은 무지와 노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사회적 기회의 박탈과 소외의 결과이며, 권력 관계의 불평등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빈곤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빈곤을 불평등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남부를 동질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서발턴으로 취급되는 현 개발담론의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서발턴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포스트개발에서 강조할 점은 재분배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글로벌 남부의 가난한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원조가 아닌 개발을 통한 지원이다. 공정무역은 시장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기업과 선진국이 주도하는 공정무역보다 글로벌 남부-글로벌 북부의 상호존중에 의한 무역이 전개될 때 공정무역은 생태식민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포스트개발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윤리적 소비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물신주의는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작동시키는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며, 시장과 분배의 문제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개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개발은 자본과 국가에 의한 개발 폭력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재분배의 원리가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작동되는 거버넌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길

으로는 민관 협력의 가장 바람직한 운영체계라고 이해되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이 작동하기 위한 우회적 전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고,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해체와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의 가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포스트개발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꾸준히 연구할 예정이다.

## 문헌

- 김현미, 강미연, 권수현, 김고연주, 박성일, 정승화, 2010,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서울.
- 박진희 역, 2010, *커피의 정치학: 공정무역 커피와 그 너머의 이야기*, 사람의무늬, 서울(Jaffee, D., 2007, *Brewing Justice: Fair Trade Coffee, Sustainability, and Surviv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배영달, 2005, *보드리야르와 시물라시오*, 살림, 과주.
- 성경룡, 박준식, 정동일, 2012, *지역창조의 사회학: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소화, 서울.
- 안영진, 이종호, 이원호, 남기범 공역, 2011,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 21세기 글로벌 공간 경제의 새로운 관점과 통찰*, 푸른길, 서울(Coe, N., Kelly, P., and Yeong, H., 2007,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Blackwell, Malden).
- 유강은 역, 2012,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책읽는수요일, 서울(Crouch, C., 2011, *The Strange Non-Death of Neoliberalism*, Polity Press, Cambridge).
- 이성근, 2013, *최신 지역개발론*, 집현재, 서울.
- 이영민·박경환 공역, 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여이연, 서울(Sharp, Joanne, 2009,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age, London).
-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욱, 이종희 공역, 2013, *이주*, 푸른길, 서울(Samers, M., 2010, *Migration*, Routledge, London).
- 이용균, 2014, “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시장 의존성과 생산자 주변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99-117.
- 이희재 역, 2010,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서울(Sachs, W., 2009,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Books, London).
- 임동근, 박훈태, 박준 공역, 2010, *산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학과학사, 서울(Harvey, D., 2005, *Spaces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 주성수 역, 2010,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매진, 서울(Green, D., 2008, *From Poverty to Power: How Active Citizens and Effective States Can Change the World*, Oxfam International, Dorset).
- 조효제 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서울(McMichael, P., 2005,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 Sage, London).
-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공역, 2004,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서울(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천경희, 홍연금, 윤명애, 송인숙, 2014, *윤리적 소비의 이해와 실천*, 시그마프레스, 서울.
- 천규석, 2010, *윤리적 소비*, 실천문학사, 서울.
- 최민경, 이태주 공역, 2013,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홍천(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轉換する世界と日本の國際協力*).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서울.
-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서울.

- 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a,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책으로보는세상, 서울(Nicholls, A. and Opal, C., 2005,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Sage, Trowbridge).
- 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b,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의 힘*, 시대의창, 서울(Fair Trade Advocacy Office, 2006, *Business Unusual-Successes and Challenges of Fair Trade*, Bruxelles).
- Fridell, G., 2007, *Fair Trade Coffee: The Prospects and Pitfalls of Market-Driven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 Lawson, V., 2007, *Making Development Geography*, Hodder Arnold, New York.
- Lyon, S. and Moberg, M.(eds.), 2010,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 Marston, A. 2013, Justice for all? Material and semiotic impacts of fair trade craft certification, *Geoforum*, 44, 162-169.
- Potter, R., Conway, D., Evans, R., and Lloyd-Evans, S., 2012, *Key Concepts in Development Geography*, Sage, London.
- Williams, G., Meth, P. and Willis, K., 2009, *Geographies of Developing Areas: the Global South in a Changing World*, Routledg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Oxford Dictionary*, Oxford(<http://www.oxforddictionaries.com/>, 접속일자 2015년 1월).
- 교신 : 이용균,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yonggyunlee@hanmail.net)
- Correspondence : Lee, Yong Gyu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 (접수: 2015.01.20, 수정: 2015.02.06, 채택: 2015.02.16)